다산포럼

정지창

가려워도 긁을 수 없는 곳, 영덕

영덕이 어딘지 아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서울 사람들은 '그게 어디더라' 하고 고개를 갸웃거릴 것이다. 그래도 몇 사람은 '아, 대게로 유명한 동해안의 항구 도시'라고 대답하겠지만, 이것도 정확한 답은 아니다. 실제 대게의 집산지이자 영덕대게 축제가 벌어지는 곳은 영덕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남쪽에 위치한 강구항이기 때문이다. 대게는 큰 게가 아니라 다리가 대나무처럼 쭉쭉 뻗은 게라는 뜻임을 나는 최근에야 알았다.

지난 11일 우리 일행은 대구에서 포항을 거쳐 7번 국도를 타고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영덕에 도착했다. 해맞이공원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박혜령 씨와 영덕 주민들을 만나 인사를 나눈 다음 경치 구경도 접어둔 채 원전 건설예정지를 둘러보기 위해 길을 서둘렀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 딸을 둔 박 씨는 17년째 영덕에서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 가정주부인데, 원전반대운동에 나섰다가 등을 떠밀려 이 지역의 녹색당 총선 후보로까지 추대되었다.

몇 개의 마을을 지나 우리는 약 1백만 평 규모로 건설된다는 원전 예정지에 도착했다. 전망 좋은 언덕배기에 올망졸망 펜션과 카페가 들어찬 마을 뒤편 태백산맥 쪽으로는 채석장이 보인다. 수백억을 들여 채석장을 개발한 업자는 이곳 일대가 원전 부지로 수용될 경우, 앞으로의 예상 수익금까지 합산하여 약 1300억 원을 보상금으로 챙길 것이라는 소문이다.

그러니 그가 지역발전을 내세워 원전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원전을 건설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물어보지 않고 비밀작전을 수행하듯이 슬그머니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다음, 정부는 원전을 폐기하거나 건설계획을 축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본을 제칠 수 있는 기회는 이 때'라면서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여 해외에 수출한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올해 초 경상북도는 경주~포항~영덕~울진을 잇는 동해안에 2028년까지 13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원자력복합단지(클러스터)를 만들어 원자력 수출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국내 원전의 절반이 집중돼 있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까지 있어, 동해안이 원자력 수출기지로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추진 이유란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21기 가운데 울진에 6기, 월성(경주시)에 4기 등 10기가 있는데 이곳에 추가로 6기를 더 만든다니,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경북 동해안은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 지역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영덕 일대는 제2의 후쿠시마가 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셈이다. 그렇게도 안전하다는 원전도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스리마일 등에서 벌써 몇 차례나 대형사고를 일으켰으니 앞으로 언제까지 무사고 안전 운행이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진이나 해일, 이상기후는 물론이고 미생물에서 철새까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요인들이 끔찍한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영덕에서 나는 일본 근해에서 잡은 방사능 오염 해산물들이 러시아를 거쳐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잠시 충격을 받았으나 '그래, 돈벌이가 된다면 못할 일이 없는 세상이니까…'하고 체념하고 말았다.

그리고 우리가 영덕을 다녀온 며칠 후, 부산의 기장에 있는 고리 원전에서 심각한 고장을 한 달 동안이나 숨겨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래, 원자력 산업의 속성이 원래 끝까지 잡아떼고 거짓말하고 숨기는 것이니까' 하고 넘기기에는 가시가 목에 걸린 것처럼 껴림칙하다.

이번 총선에서 핵 발전소 폐기를 공약으로 내건 단 두 명의 후보가 나선 곳은 모두 원전 밀집지역인 경북 영덕과 부산 기장이다. 원전에서 멀리 떨어져 흥청망청 전기를 쓰는 사람들은 머나먼 영덕이나 기장에서 자식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만큼 불안감과 분노를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녹색의 가치가 황금의 가치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 후쿠시마와 영덕, 기장 주민들의 고통과 절망과 분노에 공감할 수 있어야만 우리나라에도 독일처럼 녹색당이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여 원전 확장 정책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영남대 독문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 고

대를 잇는 병역 명문가를 찾습니다

임재하

조상의 가업이나 정신을 후세들이 꾸준히 이어받아 이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며 다른 사람이나 가정의 본보기가 되는 집안을 명문가라 한다. 대를 이어 높은 벼슬을 하거나 대를 이어 학문에 정진하여 큰 업적을 이룬 가계 또는 대를 이어서 국가를 위하여 몸 바친 집안 등을 명문가라 할 수 있다.

나라사랑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병역의무이행에도 다른 집안의 모범이 되는 병역명문가가 존재한다. 조부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바로 병역명문가라 칭한다. 병무청은 2004년부터 이러한 가문을 선발하여 병역명문가로 지정하고 선양하는 행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 남자들의 병역의 의무는 헌법과 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민의 기본의무이다. 누구나 해야 하는 의무이기에 우리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한 분들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소홀했으며 젊은 날의 2년 내지 3년을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 이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고 있었다.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자원을 선발하여 군에 충원하는 기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무청만이라도 이러한 헌신에 감사하고 기념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 '병역명문가' 행사다.

행사가 시작된 이래로 현재까지 전국에 1062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지정되었고 광주전남지역에는 72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지정됐다. 매년 새로운 병역명문가를 찾아 표창하고 있으며 선정된 가문 중 병역을 이행한 분들의 숫자, 병 복무인원·복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우수가문 20가문에 대하여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방부장관상 등을 수여하고 있다.

이들 병역명문가에 대하여는 인증패와 명문가증 수여 그리고 각종 국공립시설 이용할인, 협약 체결된 콘도 등의 시설이용료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점차 대를 이어 명예롭고 당당하게 병역을 이행한 이러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어 매년 신청 가문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기관과 단체도 증가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이러한 '병역명문가 우대에 대한 조례'까지 제정했다. 우리 지역도 이러한 조례의 제정 등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올해도 이러한 병역명문가 선정시상식 행사가 6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병무청에서는 3월5일부터 4월4일까지 1개월 동안 병역명문가 선정 접수를 받고 있으며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민원실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된 가문은 병무청의 심사를 거쳐 병역명문가로 확정된다.

우리 지역에서 할아버지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아들들까지 모두 현역을 마친 명예로운 병역명문가문이 많이 탄생하여 민주, 인권과 아울러 국가에 대한 충성에서도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병역의 자발적인 이행과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으면 한다.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러한 정신을 후손에게까지 전수하여 가문 전체가 명예롭게 국방의 의무를 현역으로서 수행한 가문, 이러한 가문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고 유지가 되는 것일 것이다.

병역명문가 선정이 병무청 한 기관의 행사가 아닌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자랑스런 행사로 성장하길 바란다. 또한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국가안보와 나라사랑의 정신을 되새기고 계승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네팔에서 온 편지 ⑫

바그마티 강가의 무덤덤한 장례식

박행순

네팔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문의하니 한국교민이 700명을 넘었고 2011년 한 해 동안에 항공편으로 네팔을 다녀간 한국인 관광객은 1만7495명이었다고 친절하게 이메일을 보내주었다. 인도와 중국을 거쳐 육로로 네팔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니 매주 평균 350명 이상이 네팔을 다녀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많은 관광객들이 트레킹 외에 네팔에서 무엇을 보고 경험하고 가는지 궁금하다. 지금은 건기이고 맑은 날씨라서 멀기는 하지만 카트만두에서도 설산이 뚜렷이 보인다. 그러나 무등산처럼 자주 오를 수도 없고 설산의 중턱 가까이라도 가는 사람들은 관광객의 일부일 뿐이다. 진정한 타문화 관광은 적어도 몇 주 또는 몇 달을 살면서 관광 상품으로 알려진 것 외에 현지인의 삶과 문화를 접해보는 기회까지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네팔에서는 관광 비자를 일 년에 150일만 발급하는데 8월에 입국하면 이듬해 5월까지 2년에 걸쳐 10개월을 체류할 수 있다. 최근에는 방학을 이용하거나 아예 휴학을 하고 봉사하러 오는 대학생들, 한국국제협력단원들(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과 은퇴하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네팔이 며칠간의 관광지가 아니라 보다 장기 체류의 장소로 우리에게 이렇듯 친근하게 자리매김하였다.

교민 중 가장 원로격인 허인석씨 부부로부터 네팔에 도착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들은 나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오는 많은 방문객들을 기꺼이 돕는다. 네팔에서 오래 살다 보니 네팔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그는 어느 전문 가이드보다도 더 확실하게 많은 관광객들이 놓치는 네팔문화들을 소개해 준다.

탐방 첫날에는 '덕친칼리'에 있는 힌두교 제사 장소로 안내한다. 닭과 염소의 목을 쳐서 피 제사를 지내는 현장이다. 우리나라에서 고사상 위에 놓여 있는 돼지 머리는 보았지만 피 제사 현장은 분명 새로운 이방 문화와의 만남이다.

다음 코스는 네팔의 장례문화를 볼 수 있는 '바그마티' 강가의 화장터이다. 여기저기 장작더미에 짚을 올려놓고 그 위에서 시체를 태우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우리처럼 매장하면서 슬피 우는 사람들은 없고 힌두교의 윤회설을 믿기 때문인지 모두들 무덤덤해 보인다. 강가에서는 막대기로 뭔가를 건져 올리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어떤 이들은 강물 속에 들어가서 화장 후에 남은 덜 탄 장작들을 모아서 되팔기도 하고 사금을 캐듯이 금이빨 등을 건져 올려 수입을 올리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강 언덕배기에 세워진 석탑의 작은 사원들에는 반나체로 형형색색의 칠을 하고 긴 수염과 낙엽처럼 퇴색한 머리를 똬리 틀어 올린 힌두 사제들을 본다. 그들은 방문객들을 위하여 수 미터나 됨직한 머리를 늘어뜨려서 보여주고, 가발이 아니냐고 물으니 진짜 자기 머리라고 웃으면서 대답한다. 관광객들에게 포즈를 취해주고 사진을 찍게 해 준 다음, 엄지와 검지를 비비면서 돈을 달라는 시늉을 한다. 어떤 관광객들은 진기한 사진을 찍게 해준 대가로 몇 루피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저게 무슨 수도승이냐고 구시렁거리면서 무시하고 지나가기도 한다.

이쯤 돌고 나면 점심시간이 되고 시내의 한국 식당으로 발길을 돌린다. 좀 전에 본 화장터의 광경들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코끝에는 그 역겨운 냄새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아무리 얼큰한 김치찌개가 식탁에 올라와도 식욕은 돌지 않고 구역질만 나온다. 누구든지 네팔에 와서 한국음식을 보고 반갑게 숟가락을 들지 않는 날은 '바그마티' 강변을 다녀온 날 뿐일 것이다.

〈파탄의대 객원교수·전남대학교 명예교수〉

학생 인권도 좋지만 안전 위한 소지품 검사 필요하다

지금 일선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강조한다는 이유로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소지품 검사가 학생 개인들의 사적인 프라이버시를 침범하고 군사문화의 잔재, 혹은 일본식 교육의 잔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듯 하다.

물론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것이 틀린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학교는 한두 명의 인권 보호, 혹은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절대다수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소지품 검사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일전에 중학생이 다른 곳도 아닌 학교 내에서 친구들 5명에게 칼부림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 학생은 흉기를 그냥 주머니에 넣어서 등교했다고 한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로서 겁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위험한 흉기를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도 학교에서 알 수가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존중을 위해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요즘은 진보 교육감들이 체벌금지와 함께 아예 소지품 검사도 못하도록 규정을 만드는 추세라고 한다. 만약 소지품 검사를 하게 되면 학생 본인의 동의를 얻은 뒤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흉기가 있는 학생이 동의를 할까? 학생들이 너도나도 칼을 들고 다니는 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난번 중학생이 학교 내에서 칼을 휘두른 사건, 학생들이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판국에 언제 어떤 학생이 흉기를 또 휘두를지 모르는 일이다.

그러므로 교사가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를 통해 흉기는 물론 담배나 불량 음란물 등도 회수하는 일이 어렵지 않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최인우·광주시 북구 청풍동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사 설

여수박람회 북한 참여 적극 유도해야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을 54일 앞두고,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성공적 개최와 함께 북한의 참여 여부다. 북한이 이번 행사에 참가할 경우 천안함·연평도의 아픔을 씻고, 남북 화해의 물꼬를 트는 절호의 기회이자,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켜 성공 개최를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여수박람회 조직위는 북한관 용도로 사용 가능한 1100㎡의 부지를 이미 마련해둔 상태라고 한다. 조직위 강동석 위원장은 최근 북한이 개막 전까지 참가할 것에 대비해 부지를 그대로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직위는 지난 연말 세계박람회사무국(BIE)에 북한 참가를 위한 초청장을 전달했고, 통일부에도 초청을 의뢰한 바 있다. 김충석 여수시장도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의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이규형 대사를 만나 북한이 여수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은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물론 경직된 남북관계가 조만간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실험을 예고하면서 더욱 경색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북한이 참가 의사를 밝힌다거나 우리 정부 역시 북한 참가를 요청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더라도 세계박람회는 정치·외교와 무관한 국제적 행사라는 점에서 참가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견해다. 북한이 BIE 130번째 회원국이자 지난 2010년 상하이엑스포에도 참가하지 않았는가.

순수 국제적 민간행사마저도 북한이 외면한다면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잇단 도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되, 박람회 참가가 별개라는 관점에서 용인 내지 유도할 필요가 있다. 박람회 조직위도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북한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 더 이상 방치 안 된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 등 열악한 근무환경은 기본이고 폭언, 인종차별도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 외국인노동자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월까지 접수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건수는 20건에 달한다. 여기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는 부지기수에 달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주들은 대부분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이로 인해 심할 경우 수개월째 임금을 받지못한 근로자들이 숙식마저 해결하지 못해 외국인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일부 고용주들이 이들의 임금체불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노동자센터 상담사가 이의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전화를 걸면 "외국인 편이냐"며 막말을 하는 고용주도 있을 정도라는 것이다.

또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근로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다. 대다수 근로자가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체류자가 되면서 일부 고용주들이 이를 악용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고용주들의 폭언과 협박 등 인권침해도 수두룩하다고 하니 국제 망신거리이자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말 기준 광주·전남지역 외국인은 3만7천266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이 근로자임을 감안할 때 외국 노동력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졌다. 그런 만큼 이들의 건강한 노동이 있어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성숙한 다문화 환경조성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 '국가 품격' 운운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예와 같은 현실을 방치해서야 되겠는가.

無等鼓

'alba' 청춘

1980~90년대만 하더라도 아르바이트하는 젊은이는 모범 청년의 상징이었다. 당시에는 집안이 부유하고 부모가 넉넉한 가정의 자녀도 대학생이 되면 스스로 용돈을 벌어 쓰는 경우가 많았다. 젊은이들은 휴일이나 쉬는 시간을 쪼개 주유소나 가게에서 허드렛일을 하고 보수를 받았다. 일부 힘 좋은 청년들은 공사판에서 일을 하기도 했다.

한 달을 고생해 얼마간의 돈을 손에 쥐면 부모에게 간단한 선물을 하고 친구들과 맥주 한 잔 마시는 게 아르바이트의 공식이었다. 아르바이트는 힘든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장차 나아갈 사회를 미리 노크하는 예비교육 코스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요즘 아르바이트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 아직 사회에 정식 진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삶을 위한 처절한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아르바이트와는 천양지차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층 시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 수는 43만9000여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03년에 비해 무려 45%나 급증한 수치다.

특히 청년층 전체 임금근로자 중 아르바이트의 비중은 2003년 7.3%에서 2011년 12.0%로 크게 늘었다. 더욱이 아르바이트하는 청년중 대학생의 비중이 67%(29만3000명)를 차지했다. 아르바이트 청년 10명 중 7명은 대학생인 셈이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증가에는 또 다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일부 부유층 자녀의 아르바이트 참여도 있지만 빈곤층이나, 지방 출신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죽기살기로 해야하는 아르바이트는 '낭만'과는 전혀 상관없다. 그 사이 부유층 자녀는 여유있게 스펙을 쌓아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이들에게 청춘을 되돌려주는 일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큰 책무다.

/박치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